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-57호

「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1월 1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평가항목을 정하고,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(안 제1조 등).
- 나.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.
- 다.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.
- 라.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복지환경
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02-789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(전화 042-270-5127,

FAX 042-270-5039, E-mail : kimcs4612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)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(이하 “대상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.

제3조(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) 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「환경영향평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
2.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
3.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
4.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 의원
2.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
3.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

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.

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⑪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(준용)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,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 제8조, 제1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, 제51조, 제52조, 제66조,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 제19조 제3항 및 제5항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 중 “환경부장관”은 각각 “대전광역시”로 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」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」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3조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.

대상사업의 범위(제2조제1항 관련)

구분	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
1. 도시의 개발사업	<p>가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(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)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·군 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</p> <p>1)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2)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3) 시장(市場)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라.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마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바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사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아.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자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세제곱미터 이상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차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 <p>카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

2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	<p>가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. 다만,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</p> <p>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다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</p>
3. 에너지 개발사업	<p>가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중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것</p> <p>나.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킬로리터 이상 10만 킬로리터 미만인 공사다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5조·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「한국석유공사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킬로리터 이상 10만 킬로리터 미만인 공사. 다만,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</p>
4. 도로의 건설사업	<p>「도로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</p> <p>1) 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의 신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. 다만, 「도로법」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나목·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하 같다)</p> <p>2) 2차로 이상으로서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의 확장</p>
5.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	<p>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사업</p>
6. 관광단지의 개발사업	<p>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</p> <p>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라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</p>

7. 산지의 개발사업	가.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·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) 그 밖의 사업 중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나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중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 8킬로미터 미만인 임도설치사업
8. 체육시설의 설치사업	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. 「경륜·경정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
9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	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)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65만 세제곱미터 이상 33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)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2만5천 세제곱미터 이상 25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3)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
10. 토석·모래·자갈·광물 등의 채취사업	가. 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·암석·모래·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)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: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2)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: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나.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·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(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)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

비고

1.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.
2.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.
3.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.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.

가.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(위 표 제3호가목의 송전선로 건설사업, 제4호의 도로건설사업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)

나.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,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.

다.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)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

2)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

[별표 2]

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(제2조제2항 관련)

1. 자연생태환경 분야

- 가. 동·식물상
- 나. 자연환경자산

2. 대기환경 분야

- 가. 기상
- 나. 대기질
- 다. 악취
- 라. 온실가스

3. 수환경 분야

- 가. 수질(지표·지하)
- 나. 수리·수문

4. 토지환경 분야

- 가. 토지이용
- 나. 토양
- 다. 지형·지질

5. 생활환경 분야

- 가. 친환경적 자원 순환
- 나. 소음·진동
- 다. 위락·경관
- 라. 위생·공중보건
- 마. 전파장해
- 바. 일조장해

6. 사회환경·경제환경 분야

- 가. 인구
- 나. 주거(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)
- 다. 산업

《 관계 법령 》

□ 환경영향평가법

[시행 2012.7.22] [법률 제10892호, 2011.7.21, 전부개정]

제5절 시·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<개정 2011.7.21.>

제42조(시·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) ①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,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개 정 전

제5조(시·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,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